

주민감사청구 14년간 5건, 주민발의조례 15년간 달랑 3건

지방자치 20년...전남도 주민참여 현황 보니

주민자치법·투표법 自治 막는 독소조항 많아 주민소환 성공사례 전국서 7년간 1건도 없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을 통해 보장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권한이 위축되고 있다.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법률을 제정, '무분별한 요구'라는 부작용을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 인사 및 재정권 남용, 무리한 투자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주민자치 관련 제도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부실을 규제하려는 명분을 내세워 '새로운 중앙집권'에 나서는데 대해 우려하면서 주민이 직접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등의 문턱을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주민감사청구제 14년간 5건 접수=지방자치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

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전남도내 22개 시·군은 180명 이상이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의 조사나 감사, 수사가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경우 심의에서 각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데다 자칫 자신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감사청구 인명부 작성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등 행정기관에서는 이장 등 마을대표 일부가 특정한 목적 아래 감사청구

를 추진하고, 노인 등의 명의로 빌려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본인 확인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 탓에 지난 2000년 이후 15년 간 주민감사청구는 단 5건이 접수되는데 그쳤으며, 이 중에서 3건은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주민발의 조례 15년간 단 3건 제정=지난 1999년 8월에 도입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 조례의 제정 및 폐쇄 청구권에 규정돼 있다. 인구 5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시·군·자치구는 50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이뤄진 후 지방의회를 통과해야만 조례가 효력을 발휘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년 '벼 재배농가 안정자금 지원조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조례' 등 16년간 3건의 조례가 주민의 힘으로 제정됐다.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문턱' 때문이다. 전남도에서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려면 19세 이상 전남 인구 100분의 1인 1만5381명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안' 제정 청구는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주축으로 추진해 도민 1만8516명이 서명했다. 주민 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법률적 검토 여부 등을 살핀 뒤 제정 여부 결정된다.

◇단체장 주민소환 성공사례 7년간 없어=지난 2006년 5월 제정돼 2007년 7월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돼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말 서거 전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으나 전체 유권자 2만2999명 중 1918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3%로, 개표에 필요한 투표를 33.3%(7667명)에는 미치지 못했었다.

이를 포함 제주도지사, 경기 과천·하남시장, 강원 삼척시장 등 5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투표율이 낮아 모두 무산되면서 제도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제정된 주민투표법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과 어둠 강렬한 대비... '진실' 보이는 듯



(86) 무화과



카라바조 작 '과일 바구니'

"돌담기대 친구 손 붙들고/토한 뒤 눈물 닦고 코풀고 나서/우러른 젓빛 하늘/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 섰다//이봐/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그게 무화과 아닌가/---이것 봐/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그게 무화과 아닌가..." <김지하 작 '무화과' 중에서>

나의 젊은 날이 화사한 '꽃 시절'이 길 바라 적어 있었다. 정년 꽃 시절은 오지 않았지만, 한참 후에야 시인의 시를 접하고 '꽃 없이 열매 맺는 것'의 늘푸른 의미를 알게 되어 편안해졌다. 무화과를 좋아해서 생과일은 물론, 잼이나 약밤에 버무려진 말린 무화과까지 반색하는 내게는 무화과 수확이 한창인 이즈음이 행복한 계절이다.

서양 미술에서는 정물화에서 무화과를 다룬 작품들이 많다. 특히 17세기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지역에서 많이 그려졌던 바나타스(Vanitas) 정물화에서 해골, 책, 악기, 사과, 글 등과 함께 무화과도 단골 소재였다. 라틴어로 '허무, 덧없음'을 뜻하는 바나타스는 죽음의 불가피성, 속세의 업적이나 쾌락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여러 정물

로 그 의미를 표현했다.

17세기 바로크의 대가 카라바조(1571~1610)의 작품 '과일 바구니'에도 한 쌍의 무화과가 등장한다. 벌레 먹은 사과와 잎이 시든 포도송이, 무르익기 시작한 무화과 등 과일이 한 바구니 가득 담겨있다.

이 시기 과일들은 석류의 경우 부활을, 사과와 무화과는 원죄, 포도는 성찬식의 기적을 상징했다. 카라바조의 정물화 역시 바나타스 정물화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예술적 깊이는 남다르다.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던 카라바조의 예술성이 스며든 듯 보인다.

카라바조는 싸움, 성공, 동료들의 시기, 결투, 살인, 소송, 도주, 사형선고, 해병에서 맞이한 죽음 직전의 사면 등 굴곡진 삶을 살았다. 삶과 예술에 치열했던 그였기에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당대 예술의 공허한 환상을 깨고 새로운 예술정신을 개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소방관 등장한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부위원의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소방관들이 착용하고 있는 화재 진압복과 필수 장비의 보급률과 노후화 상태를 보여주며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지방교육재정 31% 줄어...시·도교육청 파산 위기”

교육부 국감 “국가 예산 지방 떠넘기기 중단” 한 목소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악화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 지방교육 기증재정수입 및 재정수요분석' 자료를 분석, 지방교육재정의 추수입에서 경직성 경비를 뺀 순수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올해 13조1346억원에서 내년 9조412억원으로 31.2%(4조934억원) 급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가 1조8562억원이나 늘어나고, 누리과정 지원비는 5475억원, 지방재정 상황비용은 2110억원 증가할 것으

로 전망돼 전체 경직성 지출은 2조614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여객선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학교안전시설 예산 6300억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기로 돼 있어 지방교육재정 상황은 한층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사업은 중앙정부가 벌여놓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교육재정은 파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

다"며 "또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서영교 의원은 "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 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음에도 재원부담이 큰 국가 시책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액 부담케 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라 비칠 수 있다"며 "국가 시책 사업예산 미반영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는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도 무리한 복지 정책 중단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비선 30여종) | 황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 볼레프, 페이스, 웨너트 복합치료
② 에드를레이저 : 수주스팀,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③ 세오 레이저 : 현명엑스, 다리오우즈엑스
④ 피부 미백 : 쉐네나스틴 엑셀, 쉐넬엑스, 쉐비레이저
⑤ 주름·출혈 : 프락셀, 울트라펄스, 울트라펄스, 프랙토라, 인트라셀, 프락셀, 쉐네나
⑥ 모공 : 엔티시, 프락셀5종
⑦ 비만 : 네오볼트,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 385-7575, 1177 | 에스테틱 :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양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 528-1415 | 무료전화 : 080-707-7575 | 에스테틱 : 525-7555